

# 野 “이완규·함상훈 지명…권한쟁의 심판·가처분 추진”

‘韓, 문형배·이미션 후임 지명’ 반발  
민주 “위헌적 권한 남용…원천무효”  
혁신 “효력정지 신청·직권남용 고발”  
우 의장 “청문회 요청 안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션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직권남용 고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내란 동조세력의 현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등 법률적 대응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8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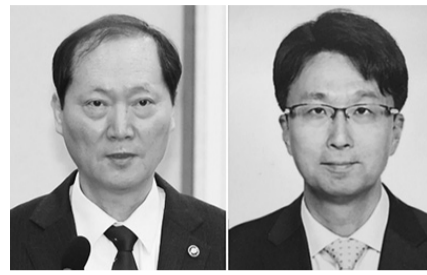
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며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것”이라며 “(한 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해야 될 두 사람을 지명하는 건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

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국무총리를 한 한덕수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 행동을 통해서 이뤄진 것에 국민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권한쟁의 심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직권남용 고발 등도 추진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내란 수괴만 파면됐지, 그 세력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씨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러더니, 내란 행위만 대행하고 있다. 이렇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내세워서 계엄이라도 선언할 판”이라며 “특히 이완규 처장은 내란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입장문을 내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

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권위 상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았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문형배·이미션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하며,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 국힘, 대선 출마 러시… 이정현·안철수 출마선언

경선참여 최대 15명 육박 전망  
컷오프 뒤 2명 최종 경선 검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자가 최대 15명에 육박할 것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8일 출마 러시가 본격화됐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이날 각각 국회와 광화문광장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이정현 전 대표는 국회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6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 선거를 만들기 위해 이번 대선에 출마한다”며 “호남 출신 이정현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은 감동의 드라마이자 비주류의 기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석 출신인 이 전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19대·20대에서 순천에 출마해 내리 당선됐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비서관과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를 선택해달라”며 “누구보다 깨끗하고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책임자이자 중도 소구력이 가장 큰 후보”라고 말했다.

의사·기업가 출신으로 4선인 안 의원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2012년 무소속으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중도 하차했고, 2017년에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21.41% 득표율로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정현 전 대표 안철수 의원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일화했다.

보수 잠룡 중 여론 조사상 선호도 1위를 이어가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9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도 9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 박형준 부산시장, 김태홍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대권 도전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의도에 선거 사무실을 계약하면서 출마 선언 초읽기에 들어갔다.

출마 의사를 밝혔던 유승민 전 의원 외에도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현역 의원들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경선룰 논의에 착수한다.

경선 흥행을 위해 후보들을 2~3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압축하고, 최종 후보를 2명까지 추려 본경선을 치르는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선욱 기자

## “광주정신으로 정치혁명… 개헌 대통령 되겠다”

김두관, 광주서 대선 출마 공식 선언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광주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광주 정신으로 정치혁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과 의 최후 대결”이라며 “압도적 정권교체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국민이 권력 통제권을 갖는 제7공화국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계엄 선포 사태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린 사건이었다. 이제는 ‘하던 대로’가 아닌, 개헌을 통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며 “광주 정신은 제정치의 좌표이자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개헌 대통령이 돼 국민 권력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대통령 국민탄핵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 헌법발안제 도입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회 선출, 양원제 도입 등 권력 분산형 개헌 구상을 제시했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김두관 제공

동시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수도권 일극 체제 탈피, 지방 거점 균형발전 전략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서울에만 있는 기회를 전국 5개 거점 도시로 분산해야 한다”며 “광주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키우고, 전국에 ‘서울대 10개’를 만들어 지방 거점 국립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및 희생자 추모를 위한 특별법’(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절차만 남게 됐다.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여객

기참사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수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가족들은 오는 6월 종료되는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광주 의원들, 광주군공항 이전지역 지원법안 발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8명 공동발의

민형배,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박균택 등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은 지난 7일 광주군 공항 이전지역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광주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23년 4월 제정된 광주군 공항 이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긴밀한 협의를 가졌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을 대표발의했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종전부지와 이전지역 및 이주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 그리고 향후 군 공항을 받아들일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과 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들의 생계지원,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중흥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제 처리될 인허가들의 추가 반영도 추진

된다.

광주지역 의원들은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공익을 위해 불편을 감내해 온 공항 종전 소재 지역과 공항이 새롭게 이전할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주호영 부의장은 물론 수원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백해련 의원 등 같은 문제 의식을 지닌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지역을 초월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에서 큰 이견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